

폴머 사건을 계기로 본 독일연방의원의 부업 규정에 관한 논란

조 현 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2005년 6월

지난 1월 독일에서는 당시 녹색당 외교정책 대변인이었던 루드거 폴머의 부업사건이 터지면서 연방의원들의 겸업 및 부업문제가 논란의 주제로 떠올랐다. 당내 외무통으로 알려진 폴머가 연방인쇄소 국제업무의 자문을 맡고 있었으며 해외여행 중 이 회사를 위해 일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정치인들의 부업이 어디까지 정당한가, 다른 형태의 불법 로비는 아닌가, 현재 허용되어 있는 겸업, 부업, 그 소득액을 어느 선까지 밝혀야 될 것인가를 놓고 각 당별로, 의원별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치인도 한 개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의원들도 사적인 영역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연방의원들이 누구를 위해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유권자들의 권리이며, 나아가서는 정치인의 잘못된 영향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그 후 폴머는 당직을 사임하였고, 연방의원의 직업에 관한 규정은 의원들의 겸업과 부업의 수입을 당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독일 연방의원들의 부업에 관한 규정은 더욱 강화된 셈이다.

정치인들의 재산상태나 수입, 또는 정치후원금 등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어떻게 잘못 연결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잣대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며,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집인: 페터 가이,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 110-742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들어가는 말

정치인들의 재산 상태나 수입, 또는 정치후원금 등은 정치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잣대이므로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정치인이 의회업무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며, 그 일이 자신의 정치직과 관련 있는 일이라면 그 수입은 과연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인가 아니면 부당한 로비자금인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의 재산이 얼마인가, 축적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입이 있는가 등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것이 불투명할 때는 여론의 저항에 부딪혀 낙마하기도 일쑤다.

물론, 사안이나 조건으로 볼 때 한국과 다르지만 이 문제는 독일에서도 한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당시 녹색당 외교정책 대변인이며, 전 장관이던 루드거 폴머(Ludger Volmer) 의원의 부업 스캔들을 놓고 연방의원들의 겸업과 부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주업과 부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제기와 연방의원직 외의 종사하는 일에 대해서만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수입까지 공개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비자사건과 함께 녹색당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비화되어 한바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끝맺음되고 있다. 여기서는 폴머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의원들의 겸업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둘러싼 공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겸업, 부업, 수입공개, 애매한 규정들
- 사건의 발단

독일 연방의원들의 겸업이나 부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겸업과 부업의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한 연방의원이 과거에 변호사였다가 의원직과 동시에 변호사 업무를 계속하면 겸업이 되는 것이고, 폴머의 경우에는 의원이 된 후에 국영 기업체였다가 현재는 민영화된 연방인쇄소의 국제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었으니 부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겸업일 경우에는 자신의 수입을 국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업일 경우에는 수입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겸업과 부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다.

폴머의 경우, 공무 여행 중 자신의 부업 업무를 같이 본 것이 문제가 되었다. 폴머는 신테시스(Synthesis)라는 자문회사의 대표로, 이 회사의 주요고객은 연방인쇄소다. 그는 외국에서 독일여권을 만드는 업무에 관해 자문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독일 연방인쇄소는 여러 업무와 함께 비자문서를 찍어내는 일도 맡고 있다. 폴머는 의원 재임 중 이 회사의 일로 2년간 두 번이나 남아프리카와 베트남에 갔다는 사실을 털어 놓았는데 이 말도 질문이 여러 번 반복된 후에 나온 것이어서 의심을 가중시켰다.

신테시스사에서 폴머가 했던 일은 의회의 규정을 어기는 불법은 아니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폴머 의원에게 주로 가해지는 비판은 주장관직을 맡았었고, 현재 당의 외교정책 대변인을 맡은 연방의원이 민영화된 인쇄소를 위해 외국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것이다. 그는 옛날 주정부에서 일할 때 만난 사람들을 연방인쇄소의 자문 업무를 할 때도 만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줄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진 또 하나의 의문은 폴머의 회사가 연방

인쇄소를 위해서 실은 아무 일도 안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조건이 완료되었을 때 로비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만 폴머의 경우에는 해결한 일도 없이 우선 돈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쇄소 직원에 따르면, 폴머의 회사는 사십만 유로(Euro)를 받았지만 로비를 통해 성사시킨 것은 별로 없다고 한다. 이 주장은 사실 폴머의 입장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돈을 받은 대가로 아무 일도 안하는 것은 의회의 규정에 따라 불법이고 녹색당의 외교정책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설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폴머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회사 동업자인 부카르트 호프마이스터(Buchard Hoffmeister)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연방인쇄소를 위해 모든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일했고, 여러 번 외국에서 그쪽의 기업들과 거래를 준비하러 나갔으며" 이런 일을 한 대가로 신테시스는 통례적인 수입을 얻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외국에서 성사시킬 만한 거래를 찾아내고 그들의 고객에게 그 일이 알맞는지 분석하며 외국기업의 거래 담당자를 찾아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회사의 주요업무라는 것이다. 신테시스사는 남아프리카,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였으며, 이 세 나라는 앞으로 시민들의 새 신분증명서 발급에 몇 백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호프마이스터는 신테시스의 업무는 대부분의 자문회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며 양심에 거리낄 것은 없고 보수도 보통의 수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연방인쇄소도 자기들이 신테시스에게 준 보수는 통례적인 것이며, 자문과 외국 활동에 대한 사례라고 진술하고 있다. 큰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 받을 경우 몇 주내에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수행한 업무가 없다는 의심이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물론, 폴머 사건이

불거진 것도 폴머의 신테시스를 위한 몇 차례 외국 여행 때문이므로, 아무 한 일도 없이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폴머 측에서는 이 사건이 이처럼 불거진 이유는 보수당의 정치적 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여러 가지 주장들만 보아도 폴머의 행위가 과연 로비가 아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사건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폴머뿐 아니라 의원들의 겸업이나 부업이 가끔씩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고, 두 번째는 녹색당에 대한 비판이다. 그동안 가장 도덕적인 정당으로 인식되어 왔던 녹색당이 폴머사건과 또 이 사건이 밝혀진 계기가 된 비자 스캔들로 인해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녹색당은 통독이후 당 주요이념 중의 하나인 여행의 자유화를 그들이 외무장관직을 맡게 되면서 현실화해 왔다. 폴머도 2000년 외무부 재직 시절, 독일은 세계를 향해서 더 넓게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확실하지 않은 경우 비자를 불허하기 보다는 허락하는 것을 권했다. 그 결과, 불법 입국자들을 독일내로 들여보내는 사기꾼들의 활동이 왕성해졌고 비자발급이 쉬워짐에 따라 불법노동력이 유입되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이나 기민당은 폴머 및 녹색당, 더 나아가 녹색당과 연정을 하고 있는 집권당인 사민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으며 폴머의 부업사건도 사실은 이 맥락에서 불거진 것이다.

폴머를 보호할 것인가, 희생시킬 것인가
- 녹색당의 대처

폴머의 스캔들에 대해 녹색당 지도부는 처음에는 단결을 과시하면서 폴머의 연방인쇄소 자문으로서의

부업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이라는 말뜻에 숨은 함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바에 의하면'이라는 뜻이 더 강하다. 녹색당 지도부는 밖으로는 폴머를 변호했지만 당내 회의에서는 폴머에게 신테시스 회사에 대해 추궁했었다. 이에 폴머는 인쇄소의 외국진출을 위해서 연방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단언했고 당에서는 일단 폴머를 옹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도부가 아니라 녹색당원들 사이에서 폴머나 그 자문회사가 정말 무죄인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스캔들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의혹 자체가 녹색당의 도덕성에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당원들은 폴머가 이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업을 선택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폴머사건에 대해 가장 불만을 나타낸 이는 동료 의원인 빈프리드 헤르만(Winfried Hermann)이었다. 그는 폴머의 부업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폴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지금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국민들의 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녹색당내에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다.

헤르만 의원은 이전에 있었던 녹색당 내의 유사한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폴머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우선 1999년에 연방의원이었던 첼 외즈데미르(Cem Oezdemir)가 후원자로부터 8만 마르크를 빌렸고, 공무원 상 얻은 마일리지로 사적인 비행기표를 구매하는데 이용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당직을 떠났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폴머도 당직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당내에서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밝혀졌을 때 그에 대응하는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헤르만 외에도 초창기에는 폴머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당 지도부에서 나왔으나 대부분은 당내에서 고민하고 해결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폴머에 대한 질의와 추궁은 당내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공개석상에서는 부정적인 말은 흘리지 않는 쪽으로 기선을 잡은 것이다. 이후 당내에서 의원들의 부업에 관한 법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었지만 폴머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폴머는 이미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그에 대한 사임설이 끊임없이 떠돌았고 당원들은 그를 비판하였다. 특히 자신이 과거 주장관이었던 것을 이용해서 사기업이 이익을 취하도록 도왔다는 것을 폴머가 감추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였다.

특히, 폴머에 대한 비판은 그의 지역구인 뒤셀도르프에서 더욱 심했다. 2006년 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뒤셀도르프의 주 비례대표 리스트에 그의 이름이 올라야 하는데 이 스캔들로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게 되었다. 주장관까지 지냈던 폴머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녹색당이 초기에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 이유는 우선 폴머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도덕적으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가 형식상으로 부업을 제대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심각한 데 있었다. 폴머사건이 외무부장관인 요시카 피셔에게 먼저서 비자발급을 둘러싼 사건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염려는 사실로 나타나 기민당에서는 폴머사건을 피셔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처럼 폴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피셔에게로까지 사건이 확대되면 이는 녹색당의 존립에 매우 위험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부업규정 강화 찬성 vs. 반대 논란

폴머는 정부부서에서 일하던 연줄이 신테시스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는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주 장관이었기 때문에 독일이나 외국에 자신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신테시스 일을 할 때는 의회의 규정을 항상 지켰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부업에 관한 보수당의 공격이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기 보다는 정치적 전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기민당(CDU)은 이 신테시스 사건이 있기 전부터 현 집권정부인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을 공격할 준비를 해왔고 이 사건이 기민당에게 좋은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을 떠나 폴머 외에도 부업과 관련된 스캔들을 일으킨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좀 더 명확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보다 연방의회 의원들의 부업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기민당 당수인 안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적녹연정 정부에서 의원의 부업에 대해 더욱 엄밀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민당도 이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민당(SPD)의 2인자인 슈티글러 의원(Ludwig Stiegler)은 이에 반대하면서 '완벽하게

투명한 의원'이 가능한지 묻고 있다. 역시 연방의회 의원인 페터 라우엔(Peter Rauen)은 규정을 어긴 의원을 징계해야 하지만 당이나 의원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업규정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의도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신고하는 연말에나 자신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방의회 의원의 수입 신고에 관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있다. 사민당의 당수 뮌터페링(Franz Münterfering)은 의회가 폐쇄적인 집단이어서는 안 되며 "우리들 중에는 변호사, 사업가, 기업의 경영자, 노동조합원들이 있다. 그들의 수입 공개에 관한 규정은 더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슈티글러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투명한 의원'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라지거나 부정부패가 의회에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투명성이 갑자기 확대된다고 평화와 안도가 찾아온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의회는 각각 다른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맑은 주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기업인 바텐팔(Vattenfall)에서 돈을 받으며 환경세 법에 관해서 기업의 입장을 지지하는 라인하르트 슐츠(Reinhard Schulz) 사민당 의원을 보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그의 주장을 평가하면 되며, 이익대변을 한다고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강조한다. 사민당 의원이며 폭스바겐의 노동자 평의회 위원인 한스유르겐 울(Hans-Jürgen Uhl)도 부업과 수입에 대한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연방의원들도 사적인 영역을 가질 권리

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며, 독일에서는 모든 수입을 드러내는 것이 관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의원들의 부업규정을 좀 더 철저하게 하자는 의견에 대한 반대 논리는 의회는 결코 아주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집합체는 아니며 의원들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과거 사민당 소속이었던 노베르트 간젤(Nobert Gansel)은 정치인들이 남몰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부업과 그로부터 나오는 수입을 공개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민당 연방위원장인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ulff)는 니더작센 주의 규정을 표본으로 하여 연방의회에서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주장한다. 니더작센 주에서는 부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해 주의회 의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내용은 유권자들이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돈을 받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독일 금속노조(IG-Metall) 위원장인 유르겐 페터(Jürgen Peter)는 노동자평의회 위원으로서 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그 수입은 밝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자문인과 감정인으로서의 업무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이에른 주 의장인 알로이스 글뤽(Alois Glück, 기사당)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의회 의장에게 의원들이 자신의 부수입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아예 정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에 대한 대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즉 로비 수입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검사장 볼프강 샤우펜슈타이너(Wolfgang Schaupensteiner)는 부업인 것처럼 해서 뇌물을 받은 의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부정부패 전문가인 그는 일간지인 쥐드도이체짜이퉁에서 모든 시민들은 의원들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받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의원의 겸업수입도 공개해야 하며, 부업을 겸업인양 마냥 속이고 수입을 숨기는 것 또한 앞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부업의원들의 경우

연방의원의 부업에 대한 논란은 녹색당의 폴머에서 시작되었지만 사실 다른 당의 의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들이다. 자민당(FDP) 의원인 플라흐(Ulrike Flach)는 그녀가 하고 있던 부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결국 원내직과 당직을 포기했다. 그녀는 2005년 1월 24일 맡고 있던 연방의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직과 자민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구당의 부대표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신의 가족과 위원회, 그리고 자민당과 일하고 있던 지멘스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플라흐는 지멘스사에서 몇 십년간 통역으로 일했고 의원직을 맡으면서도 이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통역일과 보수(6만 유로 정도)에 대해서는 언제나 투명하게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나의 정치적 결정에 회사와 관련된 사항이 절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에서 이러한 생각을 관철시키기 어려웠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자민당 사정을 고려해서 자리를 내어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기민당의 원내부대표인 메르쯔(Friedrich Merz)와 전 연구부 장관인 리젠후버(Heinz Riesenhuber)는 자신들의 부업이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다. 메르쯔는 빌트지와 인터뷰에서 "의회와 선거구에서 하는 일은 (내 부업 때문에) 아무 타격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일과 의회 업무가 겹치면 항상 의회 업무를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겸업인 변호사 업무와 여러 기업의 감독위원회 위원과 고문직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 메르쯔는 연방의원들이 수상, 장관이나 당대표의 일을 동시에 맡을 수 있는 것처럼 의원을 하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업을 갖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리젠후버도 자신이 맡고 있는 기업 자문과 여러 감독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의회업무와 조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그는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베를린에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선거구의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자신이 다수의 표를 얻어 당선된 것도 결국 유권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겸업 및 부업규정 강화로 - 해결의 모색

의회 의원들의 주업과 부업의 수입을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적녹연정정부의 실무연구팀에서는 센트의 끝자리까지는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 신고양식을 제안하였다. 녹색당 지도부는 겸업과 부업의 수입을 완벽하게 신고하자고 하지만 사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시사주간

지인 슈피겔지에 따르면, 사민당은 의원들이 부업으로 얻은 수입을 수입액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서 국회책자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슈티글러 사민당 의원은 수입 공개는 하지 말고 직업과 관련된 일만 공개하자고 말하고 있다. 완벽히 투명한 의원에 대한 규정을 내어 놓았을 때 의회에서 다수표를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민당과 기사당내에서도 정확한 수입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 의심하는 의원들이 있다. 기민당의 폴커 카우더 의원은 수입 공개에 반대하면서 "변호사들이 현재와 같은 경쟁의 장에서 그렇게 간단히 수입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의장에게 신고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수입의 두 배를 벌금으로 내는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다수의 찬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카우더의 의견이다.

초기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유르겐 코펠린(Jürgen Koppelin) 자민당 대표는 다른 당의 추진안들에 대해 고려해 볼만하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대신이 논의에 추기경 칼 레만(Karl Lehmann)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치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신상과 관련된 일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민당은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풀머의 행위가 정신적으로 부패했고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독일 정치인이 외국에서 조국의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풀머처럼 이를 통해 사적인 수입을 올리는 행위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비자조사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의원이 의원직 외에 부업이나 겸업을 하는 것은 의회의 행동

규정에 금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민당은 이 사건을 비자사건과 연계하여 적녹연정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위와 같은 논쟁과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면서 독일 의원들의 겸업과 부업, 그리고 그 수입에 관한 논란은 점차 규정이 강화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의회의 법전문가들이 부수입의 공개가 의원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으며, 대부분의 의원들도 모든 겸업과 부업의 수입을 연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연방의회의장인 볼프강 티어제(Wolfgang Thierse)도 이번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의원들이 어느 쪽에서 일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치의 투명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부업에 관한 정보는 앞으로 매년 나오는 의회 보고서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원의 겸업과 부업에 대한 신고규정은 이제까지 부업의 수입만을 신고하던 것에서 더욱 강화되게 되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주었을 경우 벌금도 가능하다. 적녹연정은 다양한 안을 바탕으로 여름 휴가기간 이전에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폴머는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2월 11일자로

그의 모든 당직, 즉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당대표, 중앙당의 외교정책 대변인 자리와 신테시스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녹색당 지도부에서는 끝까지 폴머를 보호하려 했으나 쏟아지는 비판과 곧 다가올 선거전에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 두려워 이같이 결정하였다. 폴머의 사임과 함께 이 문제는 여론에서 거의 사라졌다. 많은 의원들이 부업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랫동안 거론하는 것은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폴머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의원의 겸직과 부업에 관한 논란은 정치인의 영향력과 그들의 사적인 행동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계기가 되었다. 정치인들의 개인정보보호가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 특히 정치인들의 경제활동을 투명하게 공개,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논의는 자칫 잘못하면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잘못된 로비대상이 되기 쉬운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할 수 있다. 의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겸직에 관한 논란은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인들은 다른 직업인들과 달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잘못 쓰이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5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